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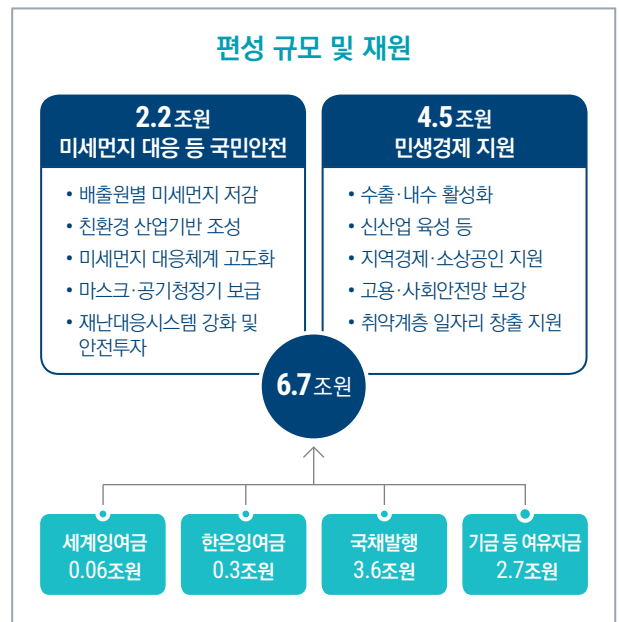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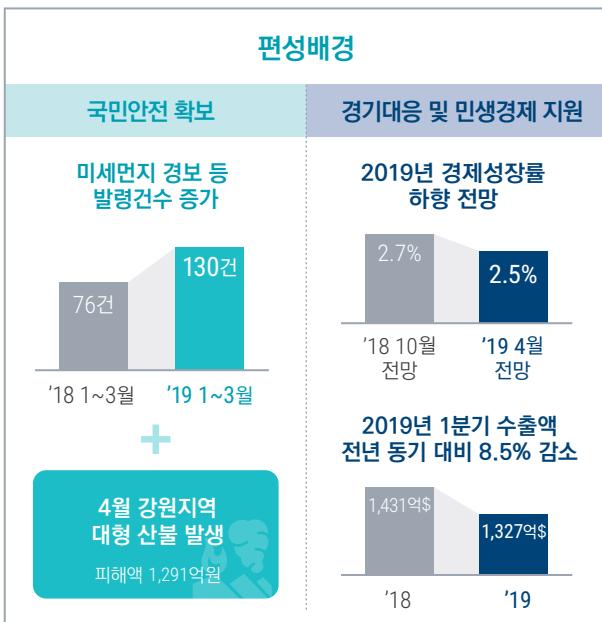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예산분석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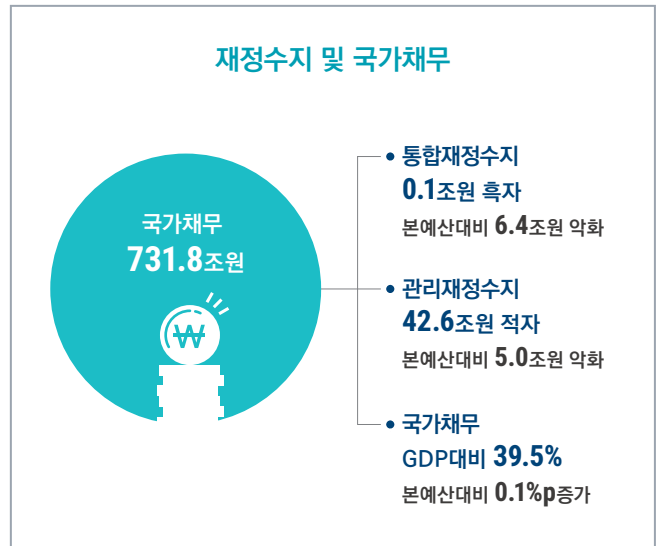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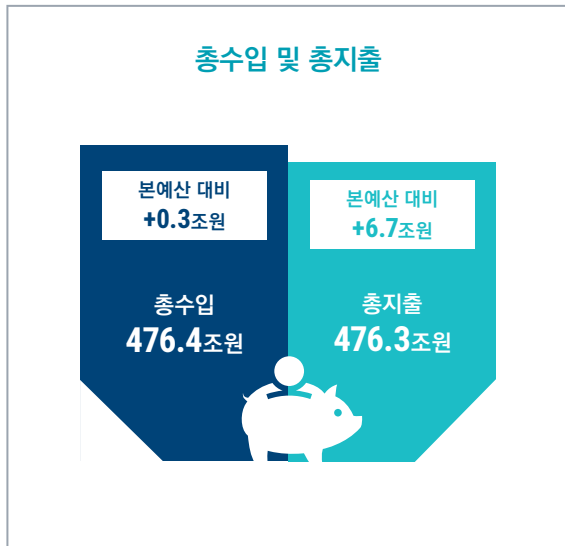
“ 정부는 4. 25(목) 미세먼지 대응 등을 통한 국민안전 확보와 선제적 경기 대응을 통한 민생 경제 지원을 목적으로 총 6.7조원 규모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였으며, NABO는 추경안의 편성요건, 경제적 효과 및 개별 사업의 타당성 등을 심층분석하였다. ”

I. 총괄분석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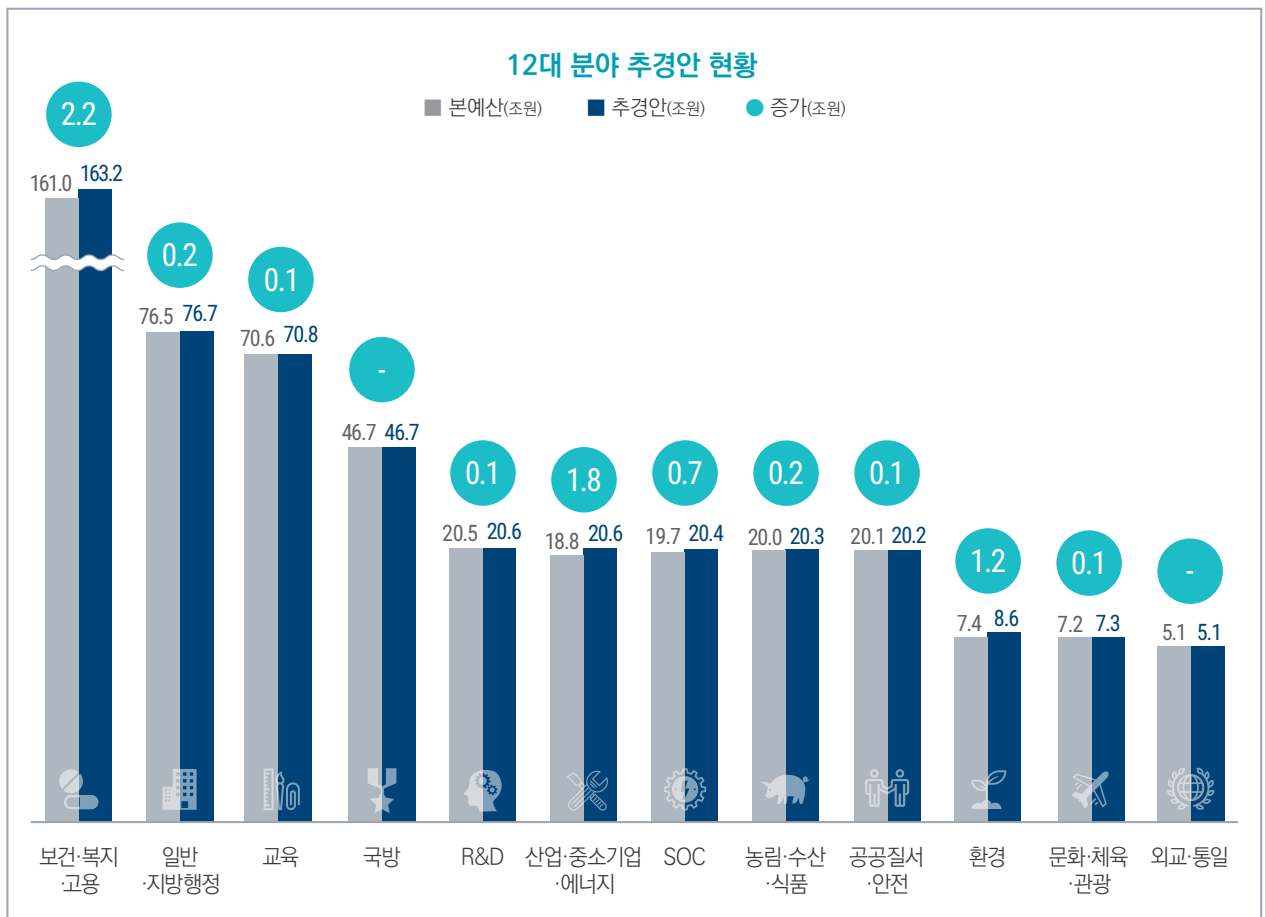


2. 재정총량



3. 분야별 자원배분

보건·복지·고용,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에서 크게 증가



II.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사항 분석

1. 편성요건 분석

국민안전 확보 분야	2019.3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미세먼지가 「국가재정법상」 '재해'인 사회재난에 포함 - 예비비 등 본예산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편성하였는지 사업별로 검토 필요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국제협력사업 병행추진 필요(국립환경과학원의 분석결과 '19. 1. 11~1. 15사이 미세먼지 국외영향이 평균 75% 수준)
경기대응 및 민생경제 지원 분야	- 경기 둔화 추세 속에서 재정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상황 - 다만, 2015~2019년 편성된 추경이 모두 경기대응을 주요목적으로 하고 있어, 어느 정도의 경기침체를 추경안 편성요건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의 가능 - 민생경제 지원 및 경기활성화에 즉각적인 효과가 있는 사업으로 구성되어 집행효과를 극대화할 필요

2. 재정건전성 분석

재정건전성	2018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채 미발행분 발생으로 국가채무 규모는 다소 감소하였으나, 2019년 명목 GDP 전망 악화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증가 전망 - 인구고령화, 국가채무 증가율, 미·중간 통상마찰 등 재정위험 요인을 고려하여 재정건전성 유지 방안 고려 필요	■ 국가채무(조원 좌축) —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우축) * 2018년은 잠정치, 2019년은 추경안에 따른 예측치
-------	--	---

3. 미세먼지 현황 및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대책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하는 미세먼지 오염도 악화

2016~2019년 1~4월 초미세먼지(PM_{2.5}) 측정치(서울기준)

■ 일평균 측정 최고치($\mu\text{g}/\text{m}^3$, 좌축) — $75\mu\text{g}/\text{m}^3$ 초과일수(일, 우축)

연도	일평균 측정 최고치 ($\mu\text{g}/\text{m}^3$)	$75\mu\text{g}/\text{m}^3$ 초과일수 (일)
'16	~95	~3.5
'17	~105	~7.5
'18	~125	~8.5
'19	~155	~11.5

* 초미세먼지 $75\mu\text{g}/\text{m}^3$ 초과시 초미세먼지 매우나쁨 예보 발령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에 따른 부문별 감축계획

(단위: 톤, %)

부문	2014 배출량	2017.9.26 대책		2018.11.3 대책		2022 최종	
		감축량	배출량	추가감축	최종 배출량	감축량	감축률
발전	49,350	△9,885	39,465	△1,796	37,669	△11,681	△23.7
산업	123,284	△52,791	70,493	△9,609	60,884	△62,400	△50.6
수송	90,361	△27,077	63,284	△5,282	58,001	△32,360	△35.8
생활	61,114	△8,987	52,127	△688	51,439	△9,675	△15.8
계	324,109	△98,740	225,369	△17,375	207,994	△116,115	△35.8

4. 미세먼지 대응 등을 통한 국민안전 확보 사업 분석

배출원별 미세먼지 저감	0.8조원
미세먼지 저감기술 개발 등	0.4조원
측정·감시 등 미세먼지 대응체계 고도화	0.1조원
마스크·공기청정기 보급 등 국민건강 보호	0.2조원
재난대응시스템 강화, 노후 SOC 개량 등 안전투자 확대	0.7조원
 총규모	2.2조원

•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배분비율 조정 필요

- 교통·에너지·환경세는 휘발유, 경유에 부과되어 교통시설특별회계(80%), 환경개선특별회계(15%) 등에 배분

교통시설 특별회계	환경개선 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일반회계
80%	15%	2%	3%

- 교통시설특별회계는 최근 여유재원이 과다 발생하고 있으나, 환경개선특별회계는 미세먼지 등 사업수요 확대에 자원부족 심화
- 증가하는 환경분야 재정현안 대응을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 배분비율 조정 검토 필요

• 산불대응시스템 강화사업

-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본예산에 편성된 산림재해대책비를 적극 집행할 필요

• 포항지진피해지역 도시재생사업

- 「도시재생법」 상 특별재생사업의 첫 사례인 만큼, 재난지역의 피해규모·재정자립도 및 국가책임 여부 등에 따라 차등화된 국고보조율을 선제적으로 정립할 필요

5. 경기대응 및 민생경제 지원 사업 분석

수출·투자·관광 분야 활력 제고	1.1조원
신산업 육성 등 성장동력 확충	0.3조원
지역경제 회복 및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1.0조원
고용·사회안전망 보강	1.5조원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원	0.6조원
 총규모	4.5조원

• 수출경쟁력 강화 사업

- 수출품목·국가의 다변화를 통한 근본적인 수출경쟁력 강화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 모색 필요

• 창업지원 사업

- 창업건수 등 양적 지표뿐 아니라 창업 후 생존율, 고용유발 효과 등 질적 지표를 고려하여 양질의 업종 위주로 창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 R&D사업

- 장기과제 R&D사업은 성과 도출까지 긴 시간이 소요되고 면밀한 사전계획이 요구되므로, 신규반영된 장기과제사업에 대한 심층 검토 필요